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우선구매의 현황과 이슈: 성북구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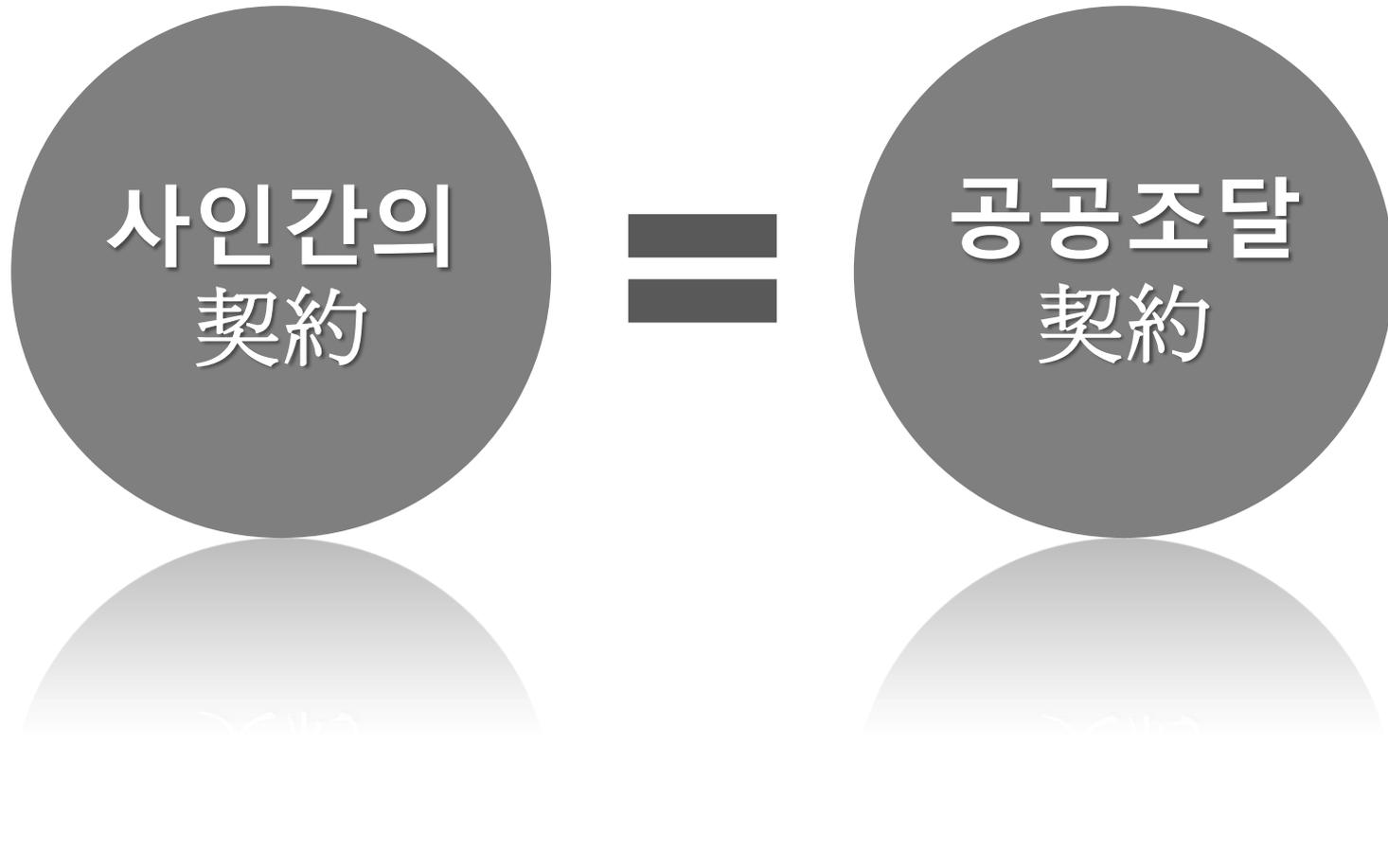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of Local Government:
Experience of Seongbuk-gu

2013. 1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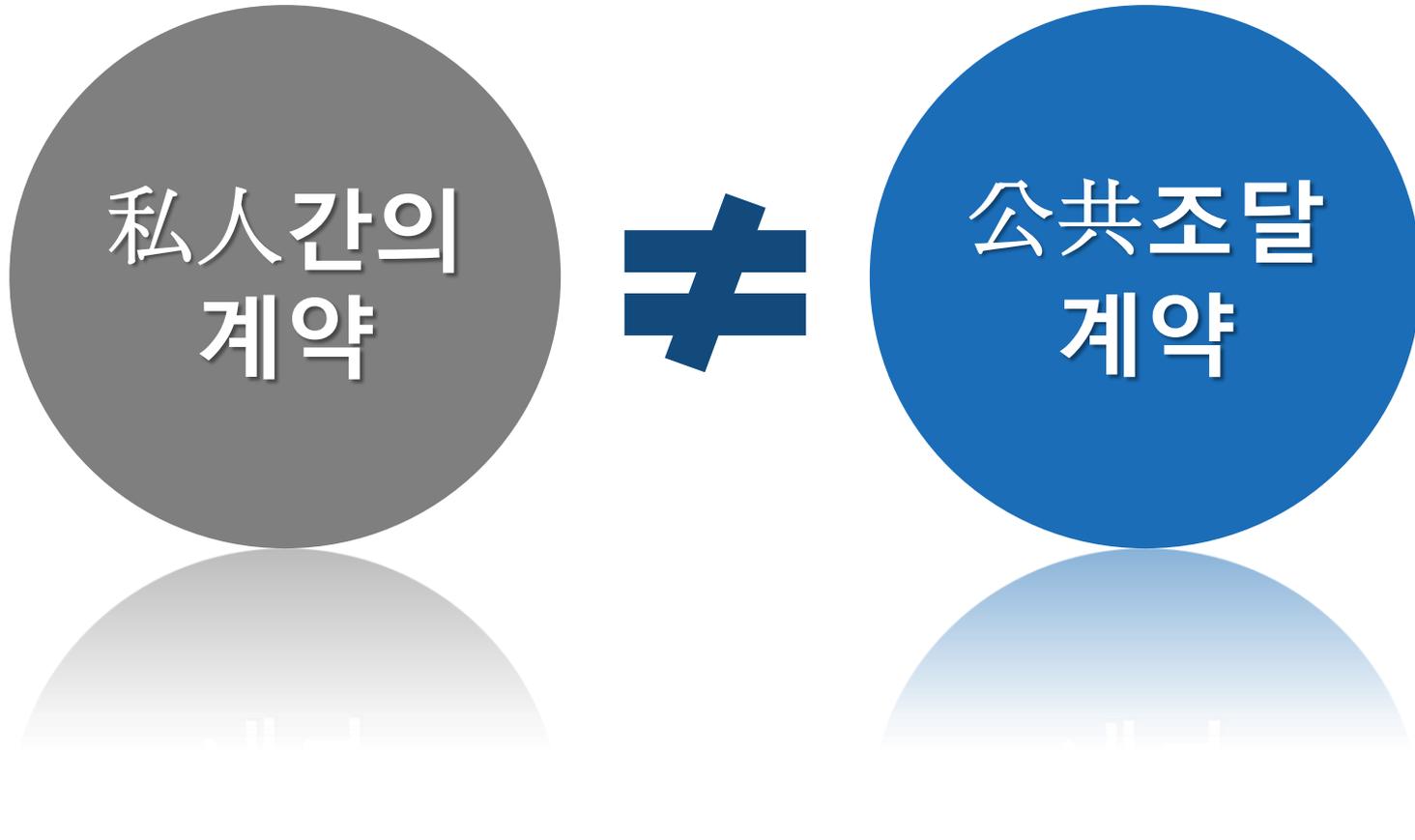
김영배 성북구청장 | Young-bae Kim, Mayor of Seongbuk-gu

Presentation for 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3, Nov. 5-7, Seoul, Korea

조달계약 : 사법상으로는 일반계약과 동일



하지만 공법상 일반계약과 다른 특성



공공조달계약이 사인간 계약과 다른 이유?

재원

(예산과 기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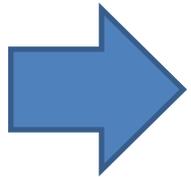
최종목적

(공익)

2

사회책임조달제도와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 : 경제적 행위와 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 (Win-Win하는 경제)
 - ☞ 정부지원의 당위
- 한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자생력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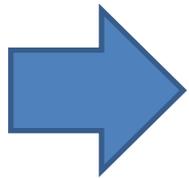


시장조성을 위한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 필요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의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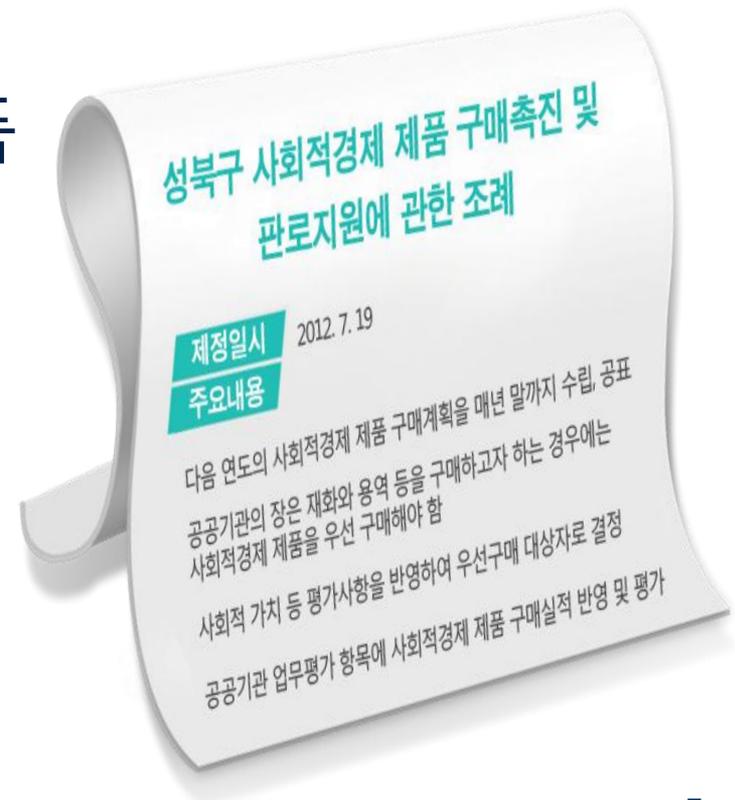
- * 독일 :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
- * 영국: 공공기관의 구매(서비스)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한 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 시행
- * 이탈리아 볼로냐는 지역경제의 20%를 협동조합이 차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조성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경제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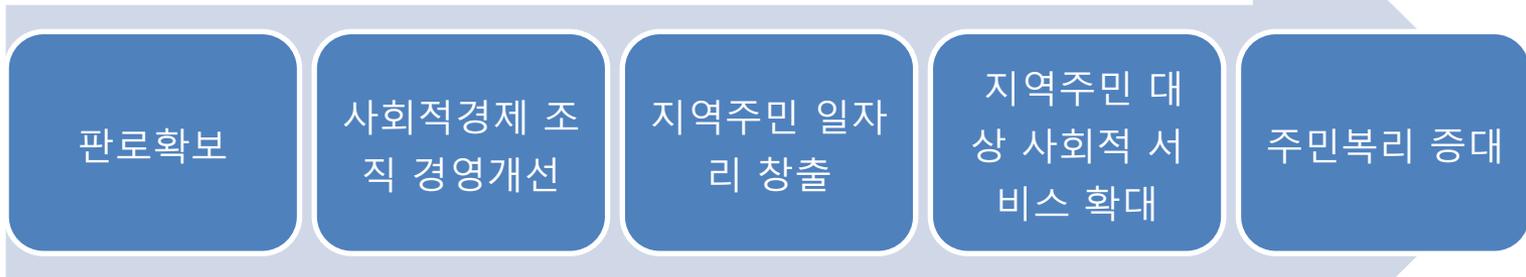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 성북구의 경험

-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7. 16)
-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시행 (2013. 1. 2)
- 전국 최초, 대형 마트 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관 입점(2012. 6. 26)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지원 목적
 -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안정적 판로확보
- 실질적 수익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 제품/서비스의 구매 장려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사회적 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 실제 공공구매 현황을 분석하여 품목한정 등 우선구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
- 구매목표액을 정하고 각 부서별로 물품과 공사·용역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구매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과 비교 검증 후 다시 부서별로 재확인
- 이후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시내용을 보고 관련부서와 상담 및 구매로 연결될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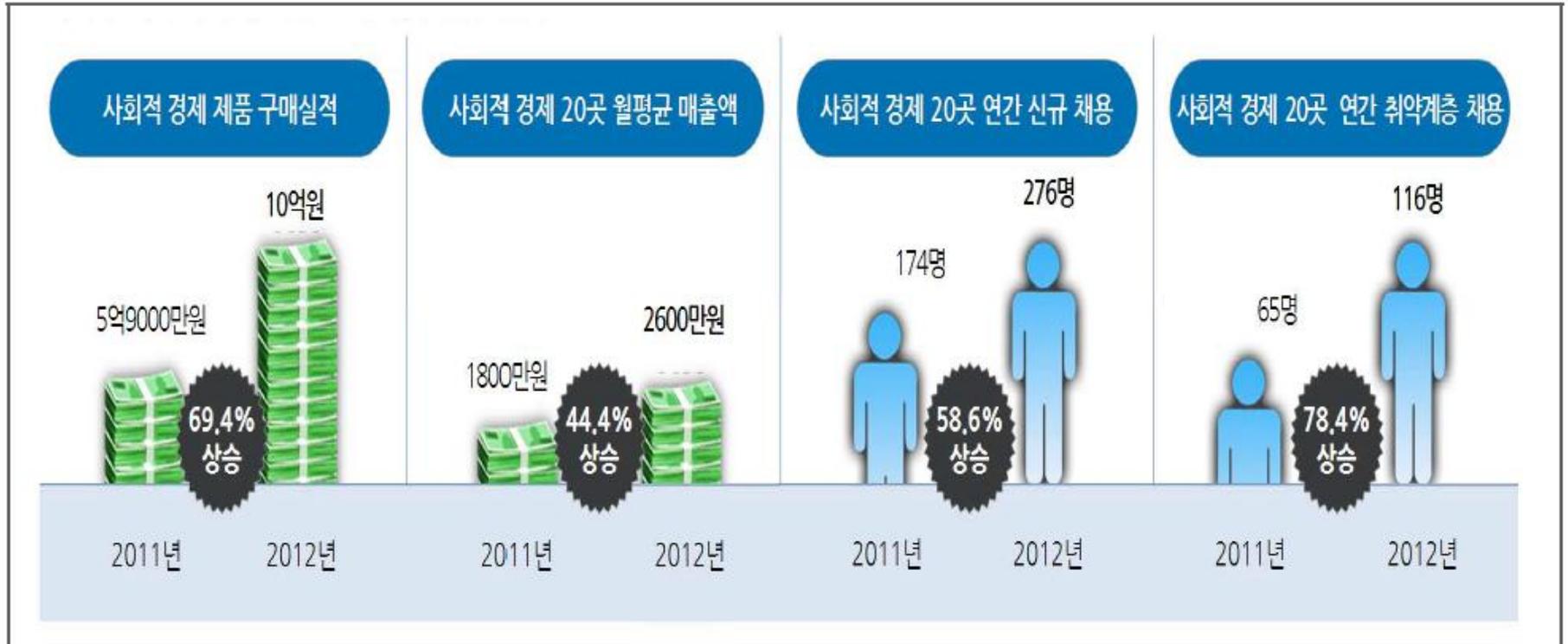
※ 2013년 10월 현재 18억 5천만원 공시

대형마트 내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관 입점

- 관내 대형유통업체 (마트)에 사회적기업 제품만 모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관을 개소 (약 43m²)
- 2012년 운영초기 월 평균 784만원, 최근 월 평균 1,060만원 매출 유지
- 의의
 - 1) 대기업과 지역 사회적 기업이 상생 토대 마련
 - 2)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례의 효과



시행 후 1년간 구매실적 70% 상승, 신규채용 증가 등 직접 효과가 발생
 2013년은 10월까지 약 18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0% 이상 증가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례의 한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부재에 따른 실효성이 미약
 - 성북구의 경험에서 드러난 이슈
 - 1) 조례의 특성 상 자치구 단위에서만 효력
 - 2) 출연기관 등은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님.
 - 3) 우선구매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사회적 경제 제품은 후순위
 - 4) 『지방계약법』 조항을 따르게 되어 있는 한계
-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구매가 가능한 상황**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사회책임조달제도 제도기반
입법 추진 필요

☞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
등의 상위법 필요**

2.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행정의 이해제고 필요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3.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구매 대상 물품의
제약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방자치단
체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차구매, 공공구매
물품 pool 구성 등으로 지역적 한계 극복**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사회적경제를 정책에 적극 도입할 의지가 있는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 회원 자치단체
서울권(8개), 인천 · 경기권(9개), 강원 · 충청권(5개),
경상권(2개), 호남권(3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광고 캠페인

201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한겨레 공동캠페인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상품전 ④ - 충남 아산시

한겨레
25

좋은 구매, 착한 소비 사회적 경제 우수 상품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적 경제,
그 꿈을 함께 하는 전국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좋은 물건과 서비스도 구입하고 착한 소비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안 쓰는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곳 나눔가게



리폼, 리사이클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재활용을 실천
상설매장과 함께 리폼교육과 베품시장도 운영

친환경 재활용 매장인 나눔가게는 안 입는 의류나 생활소품 등을 수거하여 세탁 및 수선을 거쳐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지역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오래된 옷가지나 가방의 리폼교육, 바느질 교육을 주민과 청소년, 취약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기업이기도 하다.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고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사업과 현수막가방 머리띠 가방 등 리폼을 통해 만든

7월부터 한겨레신문과의 협력으로 진행중 (격주 게재)

감사합니다